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

원자력 발전 활용에 대한 차별적 선호의 요인 분석

한정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원자력 발전 활용에 대한 차별적 선호의 요인 분석

한정훈^{a,b}
2026. 7

a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장
b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gurus72@snu.ac.kr)

인용 정보

한정훈 (2026). 「원자력 발전 활용에 대한 차별적 선호의 요인 분석」.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 (IFS 워킹페이퍼 No.2026-01, Vol. 3).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목차

초록	04
Abstract	05
1. 서론	06
2. 원자력 발전 활용의 선호	08
3. 자료원과 변수 및 모형	13
4. 경험적 분석 결과	17
5. 결론	22
참고문헌	24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원자력발전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인 간 원전 활용 선호의 차별성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원전 활용에 대한 선호를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적 관점, 즉 합리적 선택이론, 위험인식 이론, 정치적 동원 이론의 설명력을 비교·검증하였다. 분석에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2025년 실시한 「한국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 실현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원전의 계속 가동 및 활용 확대에 대한 선호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서열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정책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원전 활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환경보호를 우선시하는 응답자는 원전 활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전문가 중심 정책결정에 대한 선호는 예상과 달리 원전 활용 반대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동원 요인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원전 활용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념적 거리가 멀수록 원전 활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원전 활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경제적 이해관계나 위험 인식뿐 아니라 정치적 단서와 정당적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경제적 논의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차원을 포괄하는 숙의와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원자력발전, 원전 활용 선호, 위험인식, 정치적 단서, 정당 지지, 에너지 전환 정책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public support for nuclear power in South Korea. Drawing on rational choice, risk perception, and political mobilization theories, it analyzes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nuclear power utilization using data from the 2025 National Survey on Social Integration conducted by the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sults show that individuals who prioritize economic growth are more supportive of nuclear power, whereas those who prioritize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more opposed. Contrary to conventional expectations, greater trust in the president and stronger preferences for expert-led policymaking are associated with lower support for nuclear power. Political factors also matter: Democratic Party supporters are less supportive of nuclear power, while individuals who are ideologically more distant from President Lee Jae-myung are more supportive. The findings suggest that attitudes toward nuclear power are shaped not only by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but also by political cues and partisan alignments.

Keywords: Nuclear Power, Public Attitudes, Risk Perception, Political Mobilization, Partisan Cues, Energy Policy

1. 서론¹⁾

한국 사회의 원자력발전 (이하 원전) 활용은 1972년 고리 원전 1호기 건설과 1978년 최초 상업운전을 통해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 사회 내 전력 생산량 가운데 원전은 단지 7.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뿐이었다. 이후 원전의 활용은 꾸준히 확대되어 2025년 현재 전체 발전량의 31%를 넘어서고 있다²⁾. 특히 이와 같은 원전 활용의 역사는 높은 가동율과 이용율을 통해 원전이 한국 사회 내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국 사회가 원전의 위험(risk)을 심각하게 인식한 계기가 되었다(진상현 2012).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의 적극적인 원전활용 정책의 경로를 이탈하여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박수경·장동현 2019), 동시에 원전 활용에 대한 한국 사회 내 갈등을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Jang and Park 2020).

2025년 시작된 이재명 정부는 후보 시절 이미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그대로 쓰되 새로 짓지는 않겠다는 ‘감원전’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정책은 일관성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는 감원전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듯하다가 2026년 11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최근 AI 기술과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전력 산업용 전력 수요의 급증으로 원전의 효용성이 감원전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듯하다.

정부 정책의 변화가 보여주듯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 원전활용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때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지했으며, 최근 전력 수요의 급증 및 싼 전기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같은 맥락 속에서 왜 이러한 갈등이 지속하는가? 한국 사회 내 에너지 수급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 원전에 대한 강한 지지가 이루어질 것

1) 본 연구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워킹페이퍼를 위해 준비된 것으로 여전히 진행 중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인용은 연구자의 확인 후에 가능함을 알려둔다.

2) 원자력이 발전량에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한국수력원자력 웹페이지 참고. <https://www.khnp.co.kr/main/contents.do?key=61> (검색일시: 2026년 6월 15일)

3) 원자력 발전의 이용율과 가동율은 다음의 열린원전운영정보에 관한 웹페이지 참고. <https://npp.khnp.co.kr/ON004004002001003> (검색일시: 2026년 6월 15일)

으로 예상되는 것과 상반되게 왜 원전 지지자와 반대자 간 화해 불가능한 수준의 갈등이 목격되는가?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내 원전 활용에 대하여 이와 같은 개인들 간 차별적인 선호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이론적 논의의 설명력의 차이를 비교한다. 첫째, 원전활용에 대한 선호는 개인적 편익과 비용 계산에 따른 합리적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둘째,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의 위험(risk) 인식이 원전활용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셋째, 합리적 선택이론이나 위험인식에 따른 심리적 요인과 같은 개인 간 차별성보다 개인들이 지지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의 선호를 통해 원전활용 정책에 대한 선호가 동원된다는 정치적 동원이론에 따른 설명이다.

방법론적으로 원전활용에 관한 개인 간 선호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이러한 주요 세 이론의 설명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2025년 시행한 「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와 통합 실현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원전 활용에 관한 개인 간 선호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학술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자료는 '원자력 발전의 폐지 및 신규 원전 계획 철회'에 대한 선호를 묻는 자료를 포함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원전활용에 관한 개인적 선호를 분석을 목적으로 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세 가지 이론적 논의를 엄밀하게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약점도 지닌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원전활용에 관한 일반시민들의 선호 조사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유용성은 높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원전활용에 대한 개인적 선호의 구성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적 주장을 간략히 검토하고 핵심가설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와 변수를 소개한 후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함의를 제공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2. 원자력 발전 활용의 선호

한 사회 내 원자력 발전에 관한 정책은 원자력 발전 기술 및 안전성 검증 기술과 관련된 기술적 측면과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을 고려한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Renn 2008). 197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을 활용해 온 한국 사회의 원자력 기술은 상대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으며 원전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oh et al. 2019).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 사회 내 원전 활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한동안 한국 사회 내에서 이견 없이 활용도를 높여왔던 원자력은 문재인 정부 이후 더 이상 절대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다. 한 편에서는 AI 및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전력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며, 동시에 원전이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미래 기후변화 대응에도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형성한다. 다른 한 편에서는 원자력은 건설 비용은 물론 미래 핵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전력원이면서 동시에 원자력이 안전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특히 단 한 번의 오류가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위험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원전활용의 지지자와 반대자를 구분하는 사회적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만일 원전활용을 두고 이루어지는 사회적 양극화가 사실에 가까운 현상이라면, 그러한 양극화된 선호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개인의 정책적 선호 형성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에 근거하여 위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론적 설명은 개인이 지닌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는 정책에 따른 비용과 편익 계산에 기초한다는 고전적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른 것이다(Downs 1957; Buchanan and Tullock 1969). 이는 정책 선호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행위가 일정한 조건 아래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전 활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논의를 적용하면, 결국 원전과 관련된 요인 가운데 개인 간 비용과 편익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발견하는 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원전활용과 관련된 개인의 편익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개인이 처한 맥락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지식 수준의 영향력이라는 세 가지 측면의 영향력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맥락적 요인 가운데 원전의 근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원전활용에 따른 직접적인 이

익과 비용을 체감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분하는 지리적 맥락을 생각해볼 수 있다. 원전은 사회적 필요성은 높으나 해당 시설의 입지로 인해 위험이나 비용이 입지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반대하는 님비(Not in my backyard)의 대상일 수 있다(Dear 1992). 물론 최근 님비현상에 대한 연구는 님비현상이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것이기보다 사회적 신뢰 및 위험거버넌스와 연결된 훨씬 복잡한 현상이며, 지역이기주의만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지역민이 지닌 정당한 이유를 간과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Devine-Wright 2009). 이러한 님비현상의 성격논쟁에도 불구하고, 원전활용과 관련한 님비의 가능성은 원전주변 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거주자 간의 차별적인 선호를 예상하게 한다. 원전주변 거주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노출될 가능성을 지닌다. 반면, 원전주변 거주자는 원전 건설에 따라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접근 가능성, 원전 건설과 관련된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 원전 건설과 동시에 진행되는 사회보장시설의 확대 등으로 높은 기대 이익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원전주변의 거주여부는 비거주자와 비교할 때, 원전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선호 형성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가능케 한다.

가설1. 개인을 비교할 때, 원전 주변 거주여부는 원전 활용에 대한 선호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경향이 높다.

원전이 환경 친화적이며 저탄소 에너지원인가에 판단 여부는 원전활용여부에 관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다. 기존 연구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하나는 원자력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평가하는 관점이다(IPCC 2022, 639; Warner and Heath 2012). 원전은 전 과정(life-cycle)을 통해 탄소배출이 적은 저탄소 발전원으로 시간당 1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풍력과 유사한 13그램의 탄소만을 배출한다. 이는 석탄이 1001그램, 태양광이 28그램, 수력이 21그램을 배출하는 것에 비해 월등히 적은 양이다(NREL 2021, 3). 다른 하나는 원전이 저탄소인 것은 동의하지만 환경친화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관점이다. 대표적으로 제이콥슨(2020)은 원전은 저탄소 에너지원인 것은 맞지만 원전의 계획과 건설 및 운영까지의 장기간의 시간 동안 배출되는 탄소, 원전의 연장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탄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자로 건설에 드는 막대한 비용, 그리고 노심 용융(meltdown), 핵무기 확산,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원자력이 저탄소 에너지원이라는데 거의 이견이 없다. 다만, 원전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인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방사성폐기물,

사고위험, 우라늄 채굴, 사회적 수용성 등의 문제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원전활용에 대한 선호를 저탄소 에너지원의 측면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원자력과 관련된 환경친화성은 오히려 폐기물 및 사고 등과 관련된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친화성을 다시 지속가능성의 측면과 환경에 대한 개인적 규범(norm)으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전자는 위에서 제기한 원자력 활용이 지닌 미래의 위험성에 근거한 판단이라면, 후자는 환경과 관련된 행동을 취하기 위한 개인적 의도에 초점을 맞춘다. 그루트와 스테그(Groot and Steg 2010) 환경과 관련된 개인적 규범은 원전활용에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데 더욱 강력히 작용한다는 점을 검증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할 때, 원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평가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규범은 함께 원전활용에 반대하는 선호를 강화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결국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써 최근 AI와 반도체 데이터 센터 건설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에 원전을 활용하고자 하는 선호는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원전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원전활용을 더욱 지지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반면, 원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환경보호를 표명한 사람일수록 원전활용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설이 가능하다.

가설2. 개인을 비교할 때, 경제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원전 활용에 더 긍정적인 선호를 지니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가설3. 개인을 비교할 때,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원전활용에 더 부정적인 선호를 지니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거주지와 정책적 선호에 따른 원전 활용에 대한 지지여부 이외에 원전활용에 대한 개인의 효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정치지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치지식의 효용에 관한 대표적 연구에 속하는 카피니와 키터(Carpini and Keeter 1997)의 미국인들에 대한 연구는 정치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복잡한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이해하며, 정치적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루피아와 맥커빈(Lupia and McCubbins 1998)은 이보다 논의를 진전시켜 논리적인 선택(reasoned choice)을 할 정도로 지식을 지닌 사람들은 복잡한 기술 관련 정책에 대해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원자력과 관련해서 앨럼 외(Allum et al. 2008)은 과학적 지식을 지닌 사람들은 원자력과 같은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원자력 관련 지식을 지닌다

고 무조건 원자력 정책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관련 다양한 정책에 대해 보다 일관된 정책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고려할 때 원전 활용에 대한 개인의 선호는 정치지식의 수준에 밀접하게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일반 대중들은 이념적으로 일관된 정책적 선호를 형성하지 못하고, 다양한 정책 간 연결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정치학의 전통적인 주장(Converse 1964)에도 불구하고 일부 충분한 수준의 정치적 지식을 지닌 이들은 일반 대중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원전활용과 같은 복잡한 이슈에 대해 찬/반의 일관성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지식이 원전활용에 대한 선호에 지닌 영향력의 일정한 방향성을 가정하기는 어려워도 두 변수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가설4. 개인을 비교할 때, 정치적 지식의 수준과 원전 활용에 대한 선호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위험인식(risk perception)에 근거하여 원전활용에 관한 개인 간 선호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전통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원자력은 통제불가능하며, 치명적이고,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그러한 위험이 불균등하게 분포된 '치명적 위험(dread risk)'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식된다(Slovic 1987, 283). 진상현(2012)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인들 역시 원전에 대한 위험인식의 수준에 따라 불안·의심형, 신뢰·필요형, 반전·거부형과 같은 세 가지 상이한 인식유형이 발전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유사하게 위험인식에 따른 원전에 대한 인식 유형의 발전 및 일반 대중 간 원전에 대한 차별적인 수용성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Visschers and Siegrist 2013).

그러나 본 연구가 활용하는 설문자료는 이와 같은 원전에 대한 위험인식이 원전활용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할 문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위험인식이 직접적인 심리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보다 정부의 원전정책 및 기술, 안전성 판단 등에 대한 신뢰에 따라 간접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예를 들어 시그리스트와 크베코비치(Siegrist and Cvetkovich 2000)는 일반 대중은 원자력과 같은 복잡한 기술의 위험을 직접 평가할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기관, 전문가에 대한 신뢰(trust)에 의존하여 위험을 평가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원전 위험인식을 결정하는 핵심변수가 정부와 전문가에 대한 신뢰라는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심준섭 2009; 이대웅 외 2018).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원전에 대한 개인 간 위험인식의 차별성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 행정부에 대한 신뢰, 전문가의 정책 의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5. 개인을 비교할 때,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강할수록 원전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선호를 표현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가설6. 개인을 비교할 때,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강할수록 원전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선호를 표현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가설7. 개인을 비교할 때, 정부의 중요정책을 국민의 상식보다는 전문가나 엘리트에게 맡기는 것을 선호할수록 원전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선호를 표현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셋째, 일반 대중의 정책적 선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인 또는 정당으로부터 실마리(cue)를 찾아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일반 대중은 복잡한 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당, 신뢰하는 정치인 등이 제공하는 정보 단서(informational shortcut)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는(Lupia 1994; Lupia and McCubbins 1998). 원자력 발전 정책은 이러한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 단서가 원전활용에 대한 개인적 선호의 차별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8. 개인을 비교할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에 비해 원전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선호를 표출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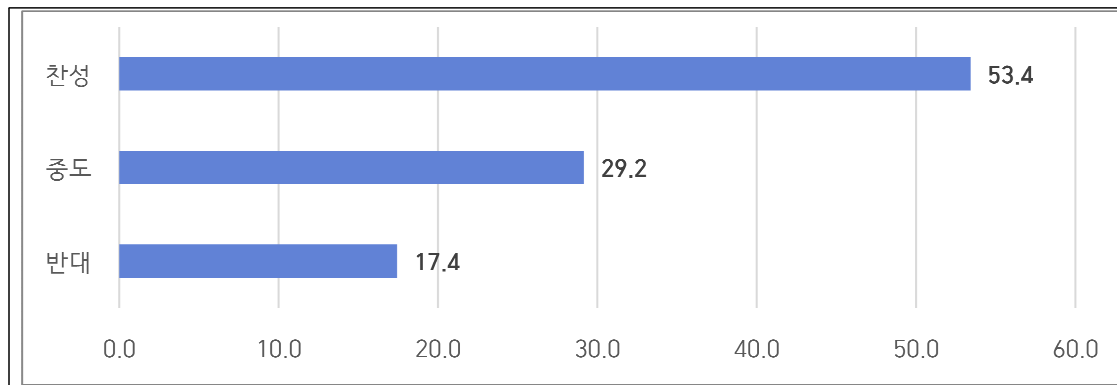
가설9. 개인을 비교할 때, 이재명 대통령과 이념적으로 유사한 성향을 지닐수록 원전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선호를 표출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3. 자료원과 변수 및 모형

원전활용에 대한 개인적 선호의 차별성에 관한 세 가지 이론적 논의의 설명력을 비교,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2025년 『한국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 실현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이하 사회통합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을 표집틀로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표집한 것이다. 조사방법은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을 발송하는 웹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응답율을 12.5%였으며, 표집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pm 1.8p\%$ 로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자료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원전가동중지 및 원자력발전 축소' 정책에 대하여 5점 척도의 찬성과 반대를 묻는 설문항을 활용하였다. '매우 찬성'을 1, '매우 반대'를 5로 코딩한 응답항을 고려할 때, 답항의 수치가 커지는 반대 선호를 표출할수록 원전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자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여기서는 응답항을 그대로 둔 채 설문항의 의미를 '원전의 계속 가동과 활용 확대'로 수정하였다. 그에 따라 응답항의 수치가 커질수록 이에 대한 '원전의 계속 가동과 활용 확대'에 대한 찬성을 의미한다. <그림1>은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자 분포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의 53.4%는 원전의 계속 가동과 활용을 확대하는데 찬성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46.6%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거나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원전 활용에 대하여 80%가 넘는 찬성이 이루어졌던 과거에 비해 (진상현 2012, 4), 원전활용이 한국 사회 내 심각한 갈등 사안이 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그림1> 원전의 계속 가동과 활용 확대에 대한 선호 분포



자료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2025 사회통합조사

주요 독립변수는 세 이론적 논의에 따라 제기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른 가설1부터 가설4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수를 활용하였다. 원전주변거주여부는 설문항에 거주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없는 한계로 인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단위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한빛 원전이 위치한 전라남도,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시, 새울원전이 위치한 울산시, 월성과 한울원전이 위치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원전주변거주자로 간주하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원전주변 비거주자로 간주하였다.

다음으로 경제발전 및 환경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2026년 새해에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답항은 기타를 포함한 14개의 정책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는 이 가운데 제1순위의 과제와 제2순위의 과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정책과제로 선택한 응답자는 1,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0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기후위기 등 환경위기 대응'을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정책과제로 선택한 응답자는 1,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0으로 코딩하였다.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정책과제에 이 둘 모두를 선택한 응답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두 변수는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각 정책에 대한 선호가 원전활용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으로 추정된 값은 각 정책을 우선하는 선호를 지닌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의 설명력을 측정하기 위한 가설4의 정치지식 수준은 한국 정치 관련 4개의 질문에 대해 정답을 맞춘 개수를 합하여 측정하였다. 4개의 질문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하지 않은 대통령은 누구인가?',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몇 명인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직책은 무엇인가?'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해 정답을 맞춘 사람은 각각 73%와

67%에 해당하였다. 반면, 두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37%와 41%만이 정답을 맞췄으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들도 각각 18%와 25%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대통령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국회 관련 사안에 응답자 비율이 낮다는 사실은 국회보다는 대통령 관련 사항에 더 관심이 높은 한국인들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위험인식에 따른 원전활용의 선호 차별성을 설명하는 두 번째 이론과 관련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두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와 전문가에 의한 정책결정에 대한 선호와 관련된 질문을 활용하였다.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다음의 정부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대통령과 행정부(일반관료, 정부부처)에 대해 묻는 것을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응답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0점부터 매우 신뢰한다는 10점까지의 등간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정책결정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부의 주요정책은 전문가나 엘리트보다 국민의 상식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응답자들의 응답은 매우 동의하다는 1점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5점까지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특히 가설7은 국민의 상식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선호에 따른 원전활용의 선호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의 주요정책을 국민의 상식보다 전문가나 엘리트에게 맡겨야한다는 의미가 되도록 역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단서(political cue)에 따른 정책적 선호의 동원을 검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여부와 이재명 대통령과 응답자 본인의 이념적 거리를 활용하였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여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타 정당,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에 먼저 답한 이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어디인지를 묻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40%, 국민의힘은 24%,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는 22%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최근 각 정당의 지지율과 매우 유사한 비율에 해당한다.⁴⁾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념적 거리는 극단적인 진보적 성향을 의미하는 0점부터 극단적인 보수적 성향을 의미하는 10점까지의 연속적인 1차원의 공간에서 본인의 이념 성향을 스스로 규정한 (self-placement) 위치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념 성향에 대한 평가 간 절대적 거리를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방향성은 무시하고 거리가 멀수록 본인과 이재명 대통령과 이념적 지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본인과 이재명 대통령과 이념적 지향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주요 독립변수 이외에 본 연구는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속성에 해당하는 특성

4) 정당지지율에 관한 2026년 7월 3일자 동아일보 보도문.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703/134228604/2> (검색일시: 2026년 7월 4일).

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여기에는 응답자의 나이, 성별, 자산, 계층, 교육수준과 이념성향이 포함되었다. <표1>은 위와 같은 주요 변수 및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표1> 주요변수 기술통계

변수이름	분석개체수	최소값	평균	최대값
원전번호(1,2,3)	2,857	1	2.36	3
나이	3,000	18	50.37	88
성별	3,000	0	0.50	1
자산	3,000	1	4.74	12
계층	3,000	1	3.47	5
교육수준	3,000	1	3.45	5
이념성향	3,000	0	5.02	10
원전주변거주	3,000	0	0.17	1
경제우선	3,000	0	0.56	1
환경우선	3,000	0	0.03	1
정치지식	3,000	0	2.19	4
대통령신뢰	3,000	0	4.94	10
행정부신뢰	3,000	0	4.64	10
전문가정책선호	3,000	1	3.10	5
민주당지지	3,000	0	0.40	1
이념거리	3,000	0	2.50	10

자료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2025 사회통합조사

본 연구는 서열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한다. 이는 종속변수인 원전활용에 대한 선호가 반대, 중도, 찬성으로 세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속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각 변수의 회귀계수는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할 때 특정집단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게 된다.

4. 경험적 분석 결과

<표2>는 서열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원전활용에 대한 선호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세 가지 이론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전에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속성만을 고려한 기본모형에서 출발하여, 합리적 선택 모형, 위험인식 모형, 정치적 동원 모형 각각의 설명력을 검토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세 모형을 통합한 통합모형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5개 모형의 로그우도 값을 비교하면 기본모형에 비해 각각의 이론에 근거한 모형이 모두 원전활용의 개인적 선호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위험인식모형은 기본모형에 비해 4개의 추가적인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모형과 비교할 때, 3개의 추가적인 변수만으로 더 높은 로그우도 값을 보여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이다.

기본모형부터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변수는 다섯 모형 모두에 걸쳐 일관되게 정(+)의 효과를 지니고 있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원전활용의 선호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과 자산, 교육수준 및 이념성향 역시 유사하게 정(+)의 효과가 다섯 모형에 걸쳐 일관되게 관찰된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원전활용의 선호가 높으며, 자산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적 이념성향을 지닐수록 원전활용에 대한 선호가 높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른 네 개의 가설 가운데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설만이 지지되었으며, 첫 번째와 네 번째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우선 원전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지의 여부는 원전활용의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원전주변지역 거주여부가 원전에 대한 차별적인 선호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오히려 원전 가까이 거주하는 것이 원전에 대한 이해를 높임에도 불구하고 원전활용에 대한 지지에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지 않는다는 주장(Cale and Kromer 2015)을 지지한다. 정치지식과 원전활용 여부에 대한 연관성도 관찰되지 않았다.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원전활용을 지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지식 수준은 원전활용에 대한 선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반면, 가설2와 가설3은 지지되었다. 경제발전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들은 원전활용의 편익을 고려함으로써 원전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반면, 환경보전을 정책적 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일수록 원전활용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원전활용 선호의 서열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본모형	합리적선택 모형	위험인식 모형	정치적동원 모형	통합모형
	계수(오차)	계수(오차)	계수(오차)	계수(오차)	계수(오차)
나이	0.02(0.00)**	0.02(0.00)**	0.02(0.00)**	0.01(0.00)**	0.02(0.00)**
성별	0.72(0.08)**	0.72(0.08)**	0.83(0.08)**	0.74(0.08)**	0.82(0.08)**
자산	0.05(0.01)**	0.04(0.01)**	0.05(0.01)**	0.05(0.01)**	0.04(0.01)**
계층	0.09(0.05)	0.08(0.05)	0.07(0.06)	0.06(0.06)	0.06(0.06)
교육수준	0.11(0.04)**	0.11(0.04)**	0.10(0.04)**	0.11(0.04)**	0.10(0.04)**
이념성향	0.36(0.02)**	0.35(0.02)**	0.19(0.02)**	0.17(0.03)**	0.13(0.03)**
원전주변거주		0.07(0.10)			0.02(0.11)
경제우선		0.29(0.08)**			0.25(0.08)**
환경우선		-0.39(0.20)*			-0.54(0.21)**
정치지식		-0.00(0.03)			-0.02(0.04)
대통령신뢰			-0.29(0.02)**		-0.23(0.02)**
행정부신뢰			0.04(0.03)		0.04(0.03)
전문가정책선호			-0.24(0.04)**		-0.22(0.10)**
민주당지지				-0.90(0.09)**	-0.37(0.10)**
이념거리				0.19(0.02)**	0.11(0.02)**
절단점1	2.12(0.32)**	2.18(0.32)**	-0.81(0.38)**	0.91(0.34)**	-0.72(0.39)
절단점2	3.74(0.32)**	3.80(0.33)**	0.95(0.38)**	2.61(0.34)**	1.07(0.39)**
분석개체수	2,875	2,875	2,875	2,875	2,857
로그우도	-2613.0	-2602.5	-2431.4	-2491.4	-2399.9

자료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2025 사회통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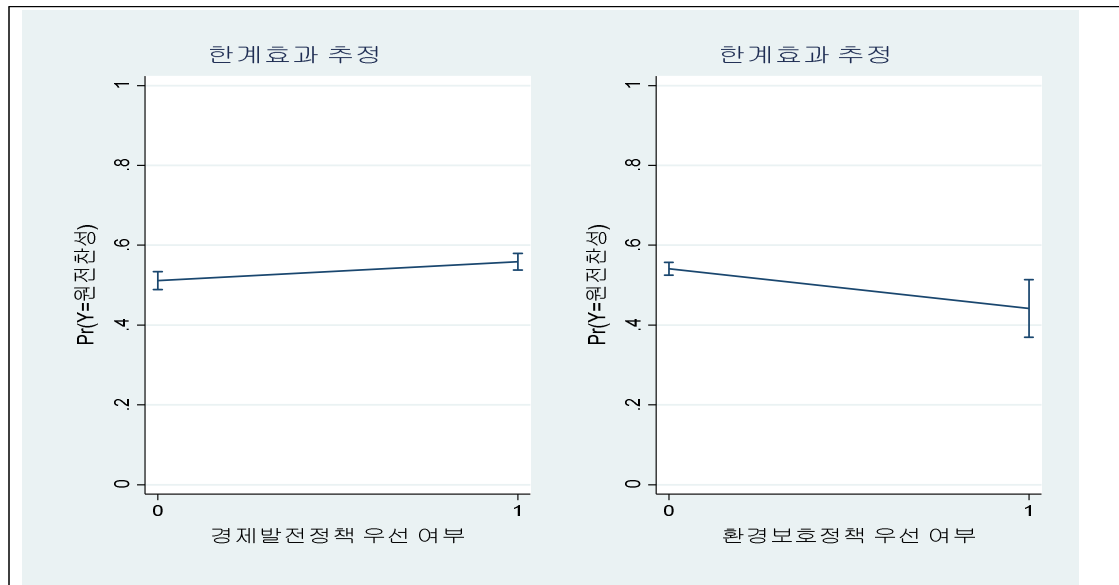
위험인식 모델에 따른 세 개의 가설 역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분석결과는 정부와 국가기관, 전문가를 신뢰할수록 원전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그에 따라 원전활용에 더욱 찬성할 것이라는 가설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국민의 상식보다는 전문가에게 정책을 맡기는 것을 선호할수록 원전활용에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 사회 내 원전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여부가 원전활용의 선호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대통령직이라는 기관신뢰가 아닌 현직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현직자 신뢰를 의미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전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지 않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원전활용에 대한 반대 선호를 강화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전문가의 정책결정에 대한 선호가 원전활용의 반대로 이어지는 결과에 대한 해석도 쉽지 않다. 그간의 한국 사회 내 원전 발전 역사를 고려할 때, 원전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사실이 아마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송해룡 외(2015)는 한국인들 가운데 원전의 위험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들일수록 과학자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에게 정책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도 원전 관련해서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원전활용에 대한 선호가 높지 않을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정치적 동원 모델과 관련된 가설8과 가설9는 지지되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른 정당 지지자들에 비해 원전을 반대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으로부터 본인의 이념적 성향이 멀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 지향과 차이가 클수록 원전활용에 찬성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모델은 위와 같이 각 모델에게 관찰되는 변수의 영향력이 서로 다른 이론적 논의를 통제하는 경우에도 통계학적으로 일관된 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열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회귀계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통합모형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원전활용에 대한 반대 또는 중간적 입장을 취할 확률 대비 원전활용을 찬성할 확률의 변화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추정해보았다. 아래 세 그림은 세 가지 이론적 모형의 주요 변수의 한계효과를 보여준다. 먼저 <그림2>는 합리적선택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닌 경제발전 정책을 우선하는 선호와 환경보호 정책을 우선하는 선호가 원전활용을 찬성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왼편의 그림은 경제발전정책을 우선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0.05만큼 원전활용에 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른편 그림은 이와 대조적으로 환경보호정책을 우선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0.1만큼 원전활용을 찬성할 확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2> 원전활용 반대(또는 중도적 선호) 대비 찬성 선호의 한계효과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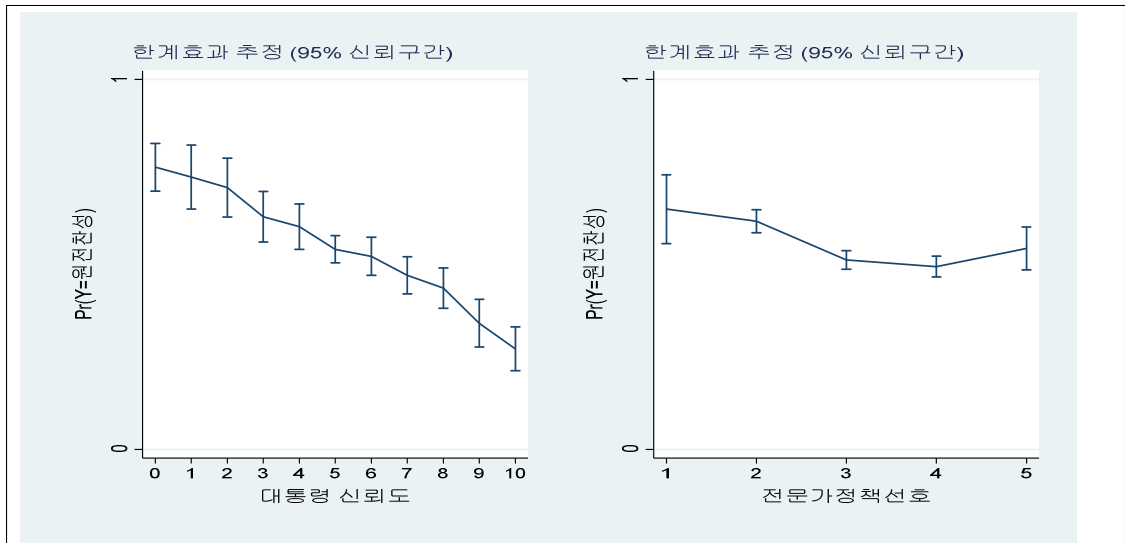


자료: <표2>의 통합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3>은 위험인식 모형의 대통령 신뢰도와 전문가가 정책을 맡는 것에 대한 선호가 원전활용에 찬성하는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나타낸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0의 수준이었을때와 비교할 때,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10까지 높아지는 경우 원전활용에 반대 또는 중도적 입장을 취할 확률 대비 원전활용에 찬성할 확률이 거의 0.5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가에게 정책을 맡기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변수값이 5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변수값이 1인 경우)와 비교할 때 0.1 정도 원전활용에 찬성할 확률이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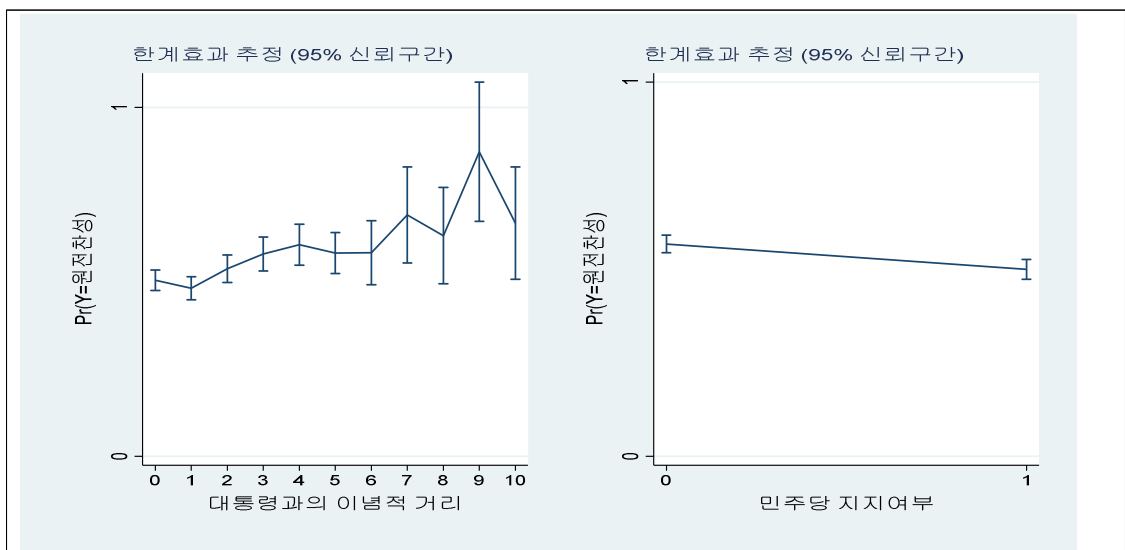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정치적 동원이론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닌 두 변수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본인과 대통령과 이념적 거리가 전혀 없을 때에 비해 10만큼 극단적인 거리를 형성하는 경우 원전활용에 반대 또는 중도적 입장을 취할 확률에 비해 원전활용에 찬성할 확률은 대략 0.15정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원전활용에 찬성할 확률이 0.07 정도 낮아진다.

<그림3> 원전활용 반대(또는 중도적 선호) 대비 찬성 선호의 한계효과 추정



자료: <표2>의 통합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4> 원전활용 반대(또는 중도적 선호) 대비 찬성 선호의 한계효과 추정



자료: <표2>의 통합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내 원전활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원전활용에 대한 개인 간 차별적인 선호가 나타나는 원인을 모색하였다. 특히 비용과 편익에 기초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설명력, 위험인식에 기초한 심리적 이론의 설명력, 그리고 정치적 동원에 초점을 둔 이론의 설명력의 차이를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용, 편익적 측면에서 경제발전 정책을 우선하는 사람은 원전활용을 찬성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환경보호를 우선하는 사람은 원전활용을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위험인식의 측면에서 대통령을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원전활용을 반대하며, 국민의 상식보다 전문가에 의한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원전활용을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동원의 측면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원전활용을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의 이념적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할수록 원전활용을 찬성하는 경향이 강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비용, 편익에 기초한 판단과 정치적 동원에 의한 판단은 일반적인 예측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특히 정치적 동원의 변수들은 한국 사회 내 원전활용에 대한 선호가 상당 부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통해 선호의 단서(cue)를 찾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과 같이 복잡한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정책을 두고 일반 대중이 정치적 단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강하다는 사실은 정치인, 정당이 원전 정책을 두고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원전 정책에 대해 정치권이 오락가락하는 경우 일반 대중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임을 암시한다. 원전의 복잡한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기 힘든 대중의 선호를 따라가는 포퓰리즘적 태도보다 원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위험인식에 기초한 예측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영향력의 방향은 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인식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못한 방법론 한계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일 것 같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오히려 기관신뢰와 전문가에 의한 정책결정에 대한 선호라는 변수 자체의 직접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어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한국 사회는 일반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정책결정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원전 전문가에 의한 정

책결정은 신뢰도가 약하다는 함의를 끌어낼 수 있겠다. 전문가에 대한 정책결정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원전활용을 반대하는 경향성은 원전 전문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본 연구는 원전활용에 대한 한국인들의 선호는 단순히 어느 하나의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전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기술적 사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기술의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원전활용에 대한 선호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이유도 원전과 관련된 사안의 이러한 성격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발견을 원전활용 여부에 대한 사회적 결정은 다양한 시각과 사회적 층위의 선호와 이해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원전활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숙의에 기초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각적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참고문헌

- 박수경·장동현. 2019. "원자력 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6호, 223-235.
- 심준섭. 2009.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신뢰, 인식된 위험과 혜택, 그리고 수용성," 『한국정책학회보』 제18권 4호, 93-123.
- 이대웅·손주희·권기현. 2018. "정부신뢰가 위험인식과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 제52권 1호, 229-257.
- 진상현. 2012.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유형 분석," 『한국행정논집』 제24권 4호, 1011-1038.
- Allum, N., Sturgis, P., Tabourazi, D., and Brunton-Smith, I. 2008. "Science Knowledge and Attitudes Across Cultures: A Meta-Analysi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17(1): 35-54.
- Buchanan, J. M., and Tullock, G. 1969.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ale, T., and Kromer, M. 2015. "Does Proximity Matter? Plant Location, Public Awareness and Support for Nuclear Energy," *The Social Science Journal* 55(2): 148-155.
- Carpini, M. X. D., and Keeter, S. 1997.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Yale University Press.
- Converse, 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Apter, D. E. (Ed.), *Ideology and Discontent*, pp. 206-261. Free Press.
- Dear, M. 1992.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the NIMBY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58: 288-300.
- Devine-Wright, P. 2009. "Rethinking NIMBYism: The Role of Place Attachment and Place Identity in Explaining Place-Protective Action."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9(6): 426-441.
-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 Row.
- IPCC. 2022. *Climate Change 2022: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cobson, M. Z. 2020.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Jang, Y., and Park, E. 2020. "Social Acceptance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The Role of Public Perceptions Following the Fukushima Accident,"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28: 1–9.
- Lupia, A., and McCubbins, M. D. 1998. *The Democratic Dilemma: Can Citizens Learn What They Need to Know?*.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REL. 2021. *Life 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Electricity Generation: Update (NREL/TP-6A20-80580)*. Golden, CO: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 Renn, O. 2008. *Risk Governance: Coping with Uncertainty in a Complex World*. Routledge.
- Roh, S., Choi, J., and Chang, S. 2019. "Modeling of Nuclear Power Plant Export Competitiveness and Its Implications: The Case of Korea," *Energy* 166: 157–169.
- Siegrist, M., and Cvetkovich, G. 2000. "Perception of Hazards: The Role of Social Trust and Knowledge," *Risk Analysis* 20(5): 713–719.
- Visschers, V. H. M., and Siegrist, M. 2013. "How 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fluences Acceptance of Nuclear Power: Results of a Longitudinal Study Before and After the Fukushima Disaster," *Risk Analysis* 33(2): 333–347.
- Warner, E. S., and Heath, G. A. 2012. "Life 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 of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Journal of Industrial Ecology* 16(S1): 73–92.



IFS 워킹페이퍼 2026-01 (Vol.3)

원자력 발전 활용에 대한 차별적 선호의 요인 분석

발행일	2026년 7월
발행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저자	한정훈(gurus72@snu.ac.kr)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전화	02-880-2893
팩스	02-882-2894
홈페이지	ifs.snu.ac.kr

이 연구내용은 연구자 개인의견이며 국가미래전략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ISSN 3058-5848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